



2023.03.20.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4호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64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CONTENTS

1. 성인 이행 경로의 다양성	05
2. OECD 국가 비교	07
3. 이행 경로의 여섯 가지 유형	12
4. 동아시아형: 느슨한 제도 연계와 늦은 이행	20

- 이 글은 한국사회 '청년 문제'의 성격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비교사회적 맥락에서 확인하고자한 시도임

- 언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지, 언제 집을 떠나고 결혼하는지 등 여러 생애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 청년의 이행 경로를 재구성해 보고자 함
- 한국 청년의 이행 경로를 OECD 회원국가 청년의 이행 경로와 비교해 한국의 특징을 드러내어 보고자 함

- 청년의 성인 이행 경로의 특징을 드러내는 가족, 학교, 노동시장 관련 지표 정보를 활용해 29개 국가를 분류하면, 여섯 개 유형이 도출됨

- 서유럽형, 북유럽형, 동유럽형, 동남유럽혼합형, 남유럽형, 동아시아형임
-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동아시아형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고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몰려 있는 특징을 보임
- 동아시아형과 거리가 먼 유형은 북유럽형이고, 거리가 가까운 유형은 남유럽형임
- 북유럽형은 분가, 동거, 출산 시점이 비교적 이르고, 교육 수준이 높지만 구직 기간이 짧고 고용률이 높은 편임

- 청년들에게 한국사회는 공식(형식)적으로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지만, 비공식(실질)적으로는 고도로 계층화된 기회를 제공함

- 지위와 부가 철저하게 교육에 따라 배분되었던 한국사회에서 교육 기회는 형식적으로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음.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교육 경쟁에 뛰어 들었음
-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시장이 확대되던 시기에는 뜨거운 교육열과 이에 상응하는 교육 기회의 확대가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했음
- 그러나 2010년대에 오면 교육 기회 확대는 한계에 다다른 한편 노동시장 기회는 계층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접어들게 됨
- 같은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승패에 따른 결과 차이가 커지게 됨
- 한국 청년이 집을 떠나는 시점이 2010년대에 와서 매우 늦어진 것은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함

- 교육-노동시장 연계 측면에서, 계층화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 (노동) 결과의 평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누구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대학을 나오건 비슷한 일을 한다면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함
-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힘을 써야 하고, 기본소득 등 사회 정책의 맥락에서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 보아야 함

1. 성인 이행 경로의 다양성

이 글은 오늘날 한국사회 '청년 문제'의 성격을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비교사회적 맥락에서 확인한다. 2000년대 중반 이래 한국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청년 문제의 한국적 맥락에 대한 탐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가족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서 일정 부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한국 고유의 특징도 있다. 한국 사례만을 두고 보면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별하기 어렵고, 그런 만큼 이 현상의 사회적 함의도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청년 문제를 말할 때에 많은 경우 특정한 생애 사건이나 생애 측면을 따로 떼어 말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은 교육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결혼은 결혼대로 문제라는 식의 논의가 많다. 이 글은 교육, 노동, 가족이라는 삶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 문제의 성격을 포착해 보고자 한다.

한 사람의 삶의 맥락에서 보면 교육과 노동, 가족은 맞물려 있다. 언제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는 언제 어떤 일을 하는지와 연결된다. 언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언제 부모로부터 나와 사는지와 연결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과 연결된다. 이처럼 생애의 맥락에서 보면 학교와 노동시장이 연결되고, 원가족과 생식가족이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생애 주요 사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 사회에서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경로를 구성해보고자 한다. 여러 나라의 자료를 활용해 나라별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인구 변화나 기술 변화,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 교육과 노동시장 정책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크다. 한편으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이러한 관심에서 교육, 노동시장, 사회 정책의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각 정책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논의가 다소 분절적으로 제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청년의 이행 경로에 주목해 여러 정책 영역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교육, 노동시장, 가족 제도의 맞물림에 주목해 한국 청년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경로의 특징을 비교사회적 맥락에서 드러냄으로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OECD 국가 비교

성인 이행 국면을 규정하는 차원은 두 가지다. 학교-노동시장 이행과 (원)가족-(생식)가족 이행이다.

학교-노동시장 이행 측정 지표는 평균졸업연령과 학업-일 병행자 비중,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린 기간, 졸업 후 1년 시점의 고용률, 고용된 일자리 중 임시직 비중, 니트(NEET) 비중이다. 이는 언제 학교를 떠나 언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 어떤 자리에 얼마나 많이 진입하는지와 같은 학교-노동시장 이행 타이밍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가족 이행 측정 지표는 평균분가연령과 평균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이다. 이는 언제 부모 가구에서 나와 언제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지와 같은 가족 이행 타이밍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그 외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의 비중이나 조출산율, 조혼인율, 혼외출산 비중 정보도 수집했다. 이 중 상당수는 남녀로 구분된다.

1. 2000년대 중반 시점의 성인 이행 국면

비교 대상은 OECD 회원국이다. 2022년 기준 38개국 가운데 29개국이 분석 대상이다. 비교 시점은 2000년대 중후반이다. 졸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주요 해당 연령대가 다르고 지표의 대상 연령대도 다른 점을 고려해 특정 연도로 시기를 고정하지는 않았다. 일례로 평균분가연령은 2005년도 조사 정보를 사용했고, 결혼·출산연령 정보는 2010년도 정보를 사용했다. 두 사건을 이행하는 시점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비교 시점을 2000년대 중반으로 잡은 맥락은 두 가지다. 첫째, 1970-80년대 출생자들이, 특히 1980년대생이 이행한 시기가 이 무렵이기 때문이다. 핵심 이행 기간이 20대 중후반이라고 보면 1970-80년대생의 이행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이 된다. 1981년생을 예로 들면, 이들이 만 25세인 때가 2006-07년이다.¹⁾ 2000년대 중후반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20년의 중간 시점이기도 하다. 둘째, 2000년대 후반부터 가용 정보의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OECD와 유럽연합에서 2008년 직후 국가 단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청년 실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커져 학교-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지표도 다수 포함되었다.

자료는 OECD가 제공하는 가족, 교육, 노동시장 관련 지표 정보다.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활용했다. OECD 회원국 상당수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대다수 지표 정보는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²⁾와 유럽연합 통계 데이터베이스³⁾에서 추출했다.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일부 지표 정보는 OECD가 발간하는 정기보고서나 특별보고서에서 확인했다. 지표가 아니라 특정 국가 정보가 없는 경우 먼저 개별 국가의 통계청 자료로 확인하고, 다음으로 2차 문헌(논문이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는 다른 관련 변수들로 도출한 회귀식에 근거해 추정했다.

1) 보통 '청년'으로 구획하는 만 15-29세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에는 1970-85년생이 해당하고, 2005년에는 1975-90년생이 해당한다. 만 15-34세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에 1970-89년생이 해당한다.

2) <https://data.oecd.org>

3)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표 1> 분석 변수

영역	변수명	시점	설명	출처	
가족	분가연령(남)	2005	부모 가구를 떠난 연령 추정 평균(15-34세)	eurostat	
	분가연령(여)	2005			
	초혼연령(남)	2010	평균	oecd	
	초혼연령(여)	2010	평균		
	출산연령(첫째)	2010	평균	oecd	
	출산연령(전체)	2010	평균		
학교	평균졸업연령(남)(15-34세)	2009	3-5년 내 졸업한 자의 졸업연령 평균	eurostat	
	평균졸업연령(여)(15-34세)	2009			
	학생 중 노동 병행자 비중(%)	2009			15-34세
노동시장 (청년)	구직기간(남)(개월)	2009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기간 평균(15-34세)	eurostat	
	구직기간(여)(개월)	2009			
	졸업 1년 시점 고용률(남)(%)	2009	15-34세		
	졸업 1년 시점 고용률(여)(%)	2009			
	니트 중 대졸자 비중(%)	2018	25-29세		oecd
	대졸자 중 니트 비중(%)	2013-14	15-29세		oecd

변수들은 분석에 직접 활용한 변수와 그 외 변수로 나뉜다. <표 1>이 분석에 활용한 변수 목록(이하 분석 변수)이다. 그 외 변수(이하 참고 변수)는 분석에 활용한 변수의 결측치를 추정하는 데 활용했거나 군집 유형별 특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간접 지표로 활용했다. <표 2>가 참고 변수 목록이다.

<표 2> 참고 변수

영역	변수명	시점	설명	출처
가족	부모동거비율(남)(%)	2005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 비중(25-34세)	eurostat
	부모동거비율(여)(%)	2005		oecd
	조혼인율(%)	2010		oecd
	합계출산율(명)	2010		oecd
	혼외출산비중(%)	2010		oecd
학교	평균교육종료연령	2006	15-29세	oecd
	중등교육수료자 비중(남)(%)	2010	25-34세	oecd
	중등교육수료자 비중(여)(%)	2010		oecd
	고등교육수료자 비중(남)(%)	2010		oecd
	고등교육수료자 비중(여)(%)	2010		oecd
	학생 중 노동 병행자 비중(%)	2011	16-29세	oecd
	학생 중 노동 병행자 비중(%)	2013-14	15-29세	oecd
중등교육 내 직업교육 비중(%)	2013		oecd	
노동시장 (청년)	고용률(남)(%)	2005	20-24세	oecd
	고용률(여)(%)	2005		
	고용률(남)(%)	2005	25-29세	
	고용률(여)(%)	2005		
	고용률(남)(%)	2005	30-34세	
	고용률(여)(%)	2005		
	청년 고용 중 임시직 비중(남)(%)	2005	15-24세	oecd
	청년 고용 중 임시직 비중(여)(%)	2005		oecd
	청년 임시직 중 여성 비중(%)	2005		oecd
	니트(남)(%)	2005	25-29세	oecd
	니트(여)(%)	2005		oecd
니트(전체)(%)	2007	15-24세	oecd	
노동시장 (일반)	성별임금격차(%)	2006	전일제 고용자(전연령) 중위 임금 기준	oecd
	40시간 이상 노동(남)(%)	2005	고용자 전체(전연령)	oecd
	40시간 이상 노동(여)(%)	2005	고용자 전체(전연령)	oecd

분석 변수와 참고 변수를 구별한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이행 타이밍을 나타내는 변수를 우선 선택했다. 참고 변수는 분석 변수의 결측치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추렸다. 둘째,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했다. 변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차원을 축약했을 때 각국의 자리를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해석의 용이성을 감안해 특성을 한두 가지로 한정하고, 그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변수 중 대표 변수 하나를 택했다.

2. 유형화 작업

분석 방법은 2가지다. 첫째,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이다. 주성분 분석의 주요 목적은 상관관계가 있는 여러 변수를, 원 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담은 서로 관련이 없는 소수의 변수로 대체하는 것이다. 복잡한 상호 연관 관계로 엮여 있는 20-30개의 변수를 서로 관련이 없는 2-3개 변수(차원)로 대체(축약)하면 자료의 구조를 볼 수 있다 (Bartholomew et al., 2008: 117). 둘째,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이다. 이 분석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개체끼리 한 집단으로 묶는다. 가족 이행 측면과 노동 이행 측면을 결합한 성인기 이행 구조로 볼 때 각국이 어떻게 묶이는지 확인하면 성인기 이행 경로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사용 변수는 주성분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와 같다. 군집 분석에서는 투입 변수 값을 z값으로 표준화했다. 척도가 다르면 유형화 과정에 특정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1/n$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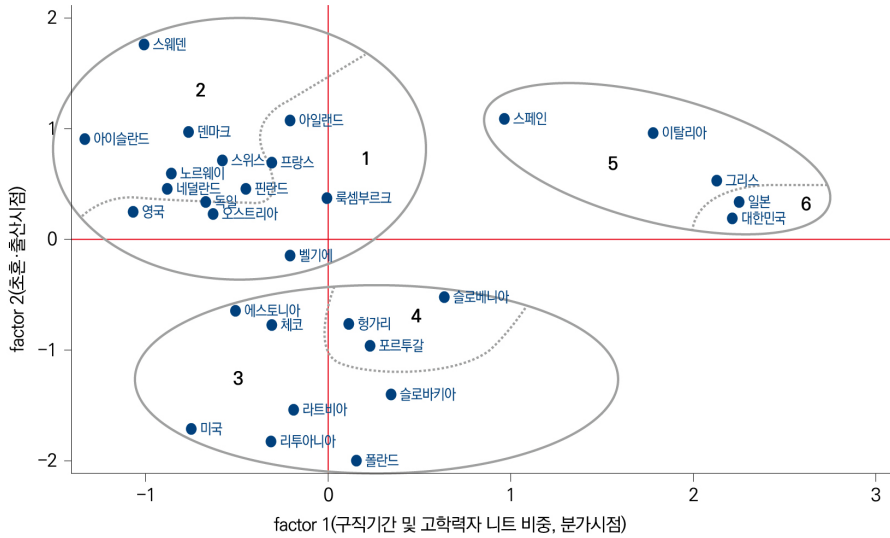
주성분 분석으로 확인하려는 차원이 이 글에서 말하는 노동 이행 구조와 가족 이행 구조이고, 둘을 합친 것이 성인 이행 경로다.

3. 이행 경로의 여섯 가지 유형

1. 성인기 이행 지형

<그림 1>은 <표 1>에서 소개한 변수 15개의 정보를 2개 차원으로 축약한 공간에 각국 이 자리한 위치를 나타낸다.⁴⁾

<그림 1> 성인기 이행 지형(OECD 국가): 차원 1과 차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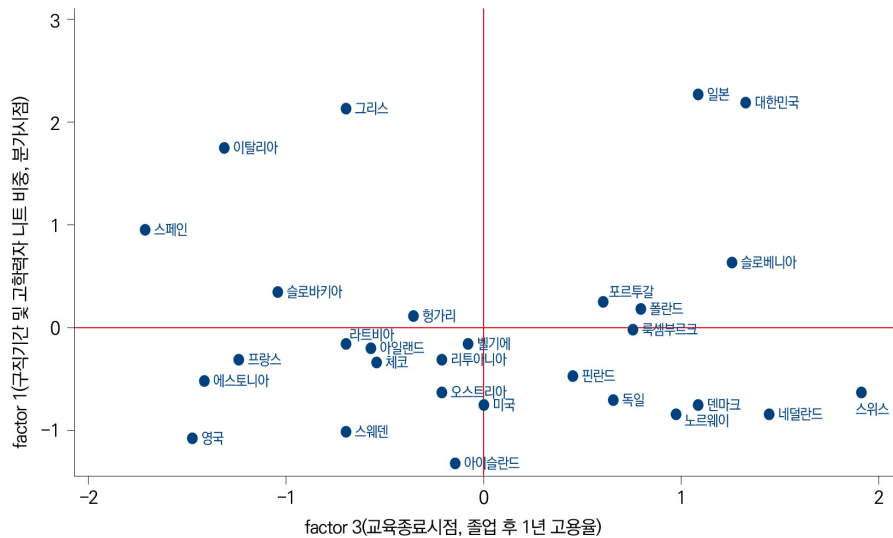


* 주: 수직교차를 유지한 채 축 회전(varimax)

4) x축과 y축은 각각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나타낸다. 첫 번째 축은 분가 시점과 구직 기간, 고학력자 니트 비중과 관련 있다. 특히 분가 시점, 구직 기간과 관련 있다. 두 번째 축은 결혼·출산 시점과 관련 있다. 그러니까 x축은 노동 시장 이행 차원을 나타내고, y축은 가족 이행 차원을 나타낸다. 여기서 분가 시점과 구직 기간, 고학력자 니트 비중 변수가 한 차원을 구성한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그만큼 이들 변수가 관련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한국은 오른쪽 상단(1사분면)에 자리한다. 근처에 일본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다. 구직 기간이 길며 고학력 니트 비중이 높다. 분가 시점과 결혼·출산 시점도 상대적으로 늦다. 반대쪽에는 미국이 있다. 구직 기간이 짧으며 고학력 니트 비중이 적다. 분가 시점과 결혼·출산 시점은 상대적으로 이른다. 왼쪽 상단(2사분면)에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몰려 있는데 주로 북유럽, 서유럽 국가다. 구직 기간이 짧으며 고학력 니트 비중도 낮다. 분가 시점도 이른 편이다. 그러나 결혼·출산 시점은 전체 평균보다 늦다. 분가 시점이 이르면서 결혼·출산 시점이 늦는 경향은 특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오른쪽 하단(4사분면)에는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동유럽 국가가 자리한다. 구직 기간이나 고학력 니트 비중은 평균을 약간 웃돈다. 분가 시점이 전체 평균보다 늦지만 결혼과 출산은 빨리 하는 편이다.

<그림 2> 성인기 이행 지형(OECD 국가): 차원 1과 차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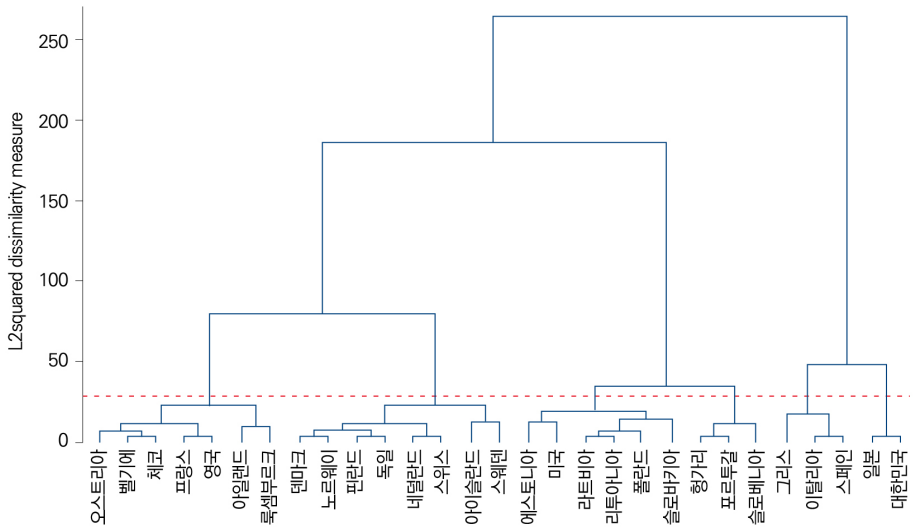
* 주: 수직교차를 유지한 채 축 회전(varimax)

첫 번째 차원과 세 번째 차원을 교차한 공간(<그림 2>)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와 남유럽의 거리가 상당하다. 남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고용률도 낮다. 차원 3에서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구직기간이 짧고, 고학력자 니트 비중이 적으며, 분가 시점이 이른다.

2. 여섯 가지 이행 경로

<그림 3>은 가족 이행, 노동 이행 관련 변수를 모두 투입해 군집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서는 6개 집단으로 구분한 수준에서 각 집단의 속성을 확인한다.

<그림 3> 군집분석 결과(거리 측정 방식: 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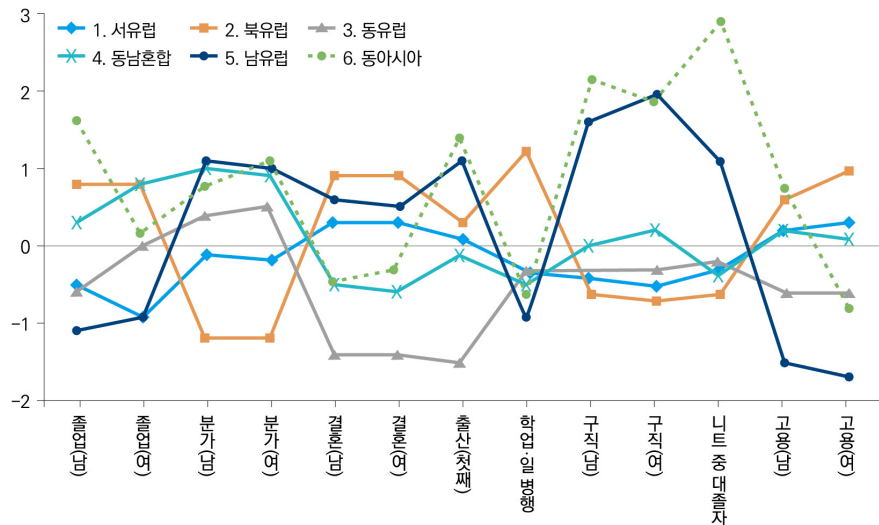
<표 3> 성인 이행 경로 유형별 소속 국가

유형		소속 국가
수준 1	수준 2	
북서유럽	서유럽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체코
	북유럽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동유럽	동유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동남유럽혼합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헝가리
남유럽 동아시아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동아시아	한국, 일본

*주: 지도상 북서쪽에서 남동쪽에 위치한 순서대로 국가명 정렬

집단 1(서유럽군)에는 북서쪽 섬나라인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체코)가 포함된다. 집단 2(북유럽군)에는 북유럽 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가 포함된다. 집단 3(동유럽군)에는 동유럽 국가(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미국이 포함된다. 집단 4(동남유럽혼합군)에는 남유럽 국가인 포르투갈과 지중해 슬로베니아, 헝가리가 포함된다. 집단 5(남유럽군)에는 남유럽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가 포함된다. 집단 6(동아시아군)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다.

<그림 4> 성인 이행 경로 유형별 속성(표준화 값)



<그림 4>는 성인기 이행 구조의 유형별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군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다. 교육 종료시점이 늦은 편이다. 교육종료시점의 평균은 북유럽형과 비슷하지만 남녀 차이가 크다. 남녀 차이는 일본에서 크다. 분가 시점도 늦는 편이다. 여성이 더 늦다. 결혼시점은 평균에 가깝다. 그러나 동거가 제도화된 북서유럽 국가와 결혼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청년이 특별히 일찍 결혼한다고 볼 수는 없다. 출산 시점이 가장 늦은 편이라는 점도 이러한 짐작을 지지한다. 한편,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몰려 있다.

이런 시간표는 학교-노동시장 연계 성격과 관련 있어 보인다. 평균교육종료시점이 늦다는 것은 고등교육이수자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2018년 기준 한국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1위다. 2018년 OECD 국가 평균은 44.3%다.⁵⁾ 고등학교 졸업자 다수는 대학에 가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일반 교육'으로 채워진다. 학업-노동 병행자 비중이 낮은 맥락이다. 교육수준은 높지만 특정 직종·직업과 관련된 특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직기간이 길다. 특히 한국은 채용 방식에서 '공채' 비중이 크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이진구·이효중·박상훈, 2016).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은 대부분 공채 형태로 이루어진다. 채용을 목표로 준비하는 이들까지 고려하면 공채의 영향력은 채용 규모보다 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비중도 상당하다. 따라서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다. 특히 대졸자는 대부분 수험생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특수한 일반 집단의 존재가 높은 고학력자 니트 비중을 일정 정도 설명한다. 물론 졸업 후 1년 시점에서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남녀 격차가 매우 크다. 또 평균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고용률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북유럽군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유사한 점은 평균 교육종료연령이다. 교육수준이 높기에 종료시점이 늦다. 이 외에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반대 위치에 있다. 교육종료연령만 하더라도 북유럽형은 동아시아형과 달리 남녀 차이가 없다. 분가 시점은 매우 이르다. 결혼시점은 늦는 편이지만, 동거를 포함하면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시점도 늦다고 볼 수 없다. 출산 시점도 늦는 편은 아니다. 청년 노동시장 관련 지표를 보면, 학업-노동 병행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구직기간은 짧은 편이고, 고학력자 니트 비중도 낮은 편이다. 고용률도 높고, 남녀 차이도 적다.

동아시아군과 가장 유사한 유형은 남유럽군이다. 두 유형의 차이는 교육수준이다. 남유럽형은 교육수준이 낮다. 고용률도 낮다. 이것을 제외하면 지표 대부분에서 특징이 유사하다.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늦고, 구직 기간이 길며, 니트 비중이 높다.

5)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9년 9월 10일).

가족 이행 측면에서 시점이 가장 빠른 유형은 동유럽군이다. 결혼·출산 시점이 이른다. 동남유럽혼합군은 늦은 분가 시점이 특징이다. 서유럽군의 특징은 이른 교육종료시점이다. 일찌감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대륙 유럽 국가의 특징이다. 세 집단 모두 여기서 각각 언급한 것 이외 지표에서는 평균 수준을 보인다.

<표 4>는 변수의 실제 척도를 복원한 값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요약한 것이다. 또 앞의 그림에는 포함되지 않은 참고 변수의 평균도 제시되어 있다. 일례로 동아시아형은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인 조혼인율이 높은 편이나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다. 혼외출산비중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북유럽형은 혼외출산 비중이 약 45%다. 일-학업 병행 비중과 관계가 있는 '중등교육 내 직업교육 비중' 지표에서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난다. 동아시아형은 20%이지만, 북유럽형은 53%이다. 니트 비중도 동아시아형이 가장 높다. 특히 여성의 니트 비중은 33%에 이른다.⁶⁾

6) 두 나라의 차이도 엄연히 있다. 일본은 분가 시점이나 교육종료시점, 초혼시점 등에서 한국보다 다소 이른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비중이나 중등교육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보다 높다. 니트 인구 비중도 약간이지만 낮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군을 구성하는 특성 전반에 걸쳐 일본이 한국보다 수준이 낮다.

<표 4> 성인 이행 경로 유형별 속성(비표준화 값)

구분	영역	변수	성인 이행 경로 유형						
			서부유럽	북부유럽	동부유럽	등남혼합	남부유럽	동아시아	
분석 포함 변수	가족	분가(남)	26.3	23.1	28.0	29.7	30.1	29.3	
		분가(여)	24.2	21.7	26.1	27.2	27.6	27.8	
		결혼(남)	32.3	33.4	29.2	30.9	33.0	31.1	
		결혼(여)	29.9	30.9	26.8	28.3	30.2	28.9	
		출산(첫째)	28.3	28.6	26.3	28.1	29.6	30.0	
		출산(전체)	30.1	30.5	28.7	29.7	31.0	31.2	
	학교	졸업(남)	21.0	22.3	20.9	21.8	20.4	23.1	
		졸업(여)	21.2	22.6	22.0	22.7	21.2	22.1	
		학업-일 병행	19.6	48.4	20.2	17.0	9.6	14.6	
	노동시장 (청년)	구직기간(남)	5.0	4.5	5.4	6.3	10.8	12.5	
		구직기간(여)	4.6	4.2	5.0	6.3	10.5	10.2	
		고용률(남)	78.4	81.6	72.2	78.8	65.1	83.0	
		고용률(여)	75.6	81.1	68.2	74.0	59.3	66.6	
		니트 중 대졸자	9.0	6.0	10.4	8.7	24.0	42.5	
		대졸자 중 니트	9.9	7.4	13.2	16.1	30.1	28.2	
	참고 변수	가족	조혼인율	4.2	5.1	5.3	3.5	4.1	6.0
			조출산율	1.8	1.8	1.5	1.4	1.4	1.3
			혼외출산비중	42.3	44.7	37.3	45.9	21.5	2.1
학교		중등교육이수(남)	48.7	49.4	57.5	53.6	40.1	36.6	
		중등교육이수(여)	42.4	42.5	46.4	46.1	39.7	31.3	
		고등교육이수(남)	36.6	33.4	29.2	20.7	25.8	55.5	
		고등교육이수(여)	43.9	43.5	45.1	34.3	35.8	62.8	
		중등교육내 직업교육	50.3	53.0	48.6	46.0	46.1	20.4	

구분	영역	변수	성인 이행 경로 유형					
			서부유럽	북부유럽	동부유럽	동남혼합	남부유럽	동아시아
참고 변수	노동시장 (청년)	고용률(20-24세 남)	61.3	68.0	56.4	53.5	52.1	53.1
		고용률(20-24세 여)	53.6	64.9	44.0	42.8	38.9	61.1
		고용률(25-29세 남)	85.4	83.2	81.9	82.1	78.9	81.2
		고용률(25-29세 여)	72.2	74.7	64.6	70.3	61.4	66.7
		고용률(30-34세 남)	90.5	89.3	84.5	89.8	88.7	91.0
		고용률(30-34세 여)	71.8	76.4	70.4	76.4	64.2	53.7
		임시직 비중(남)	26.9	40.9	21.8	39.5	42.4	35.4
		임시직 비중(여)	26.8	42.1	20.1	45.3	44.2	29.1
		임시직 중 여성 비중	46.5	49.9	39.3	45.0	43.2	53.2
		니트(남)	10.0	8.8	16.2	11.0	14.5	12.6
		니트(여)	23.0	15.8	32.2	22.7	31.6	32.8
	노동시장 (일반)	성별임금격차	14.4	15.1	17.5	7.3	11.0	36.4
		40시간 이상 노동(남)	64.8	58.8	89.5	89.8	81.9	83.3
		40시간 이상 노동(여)	38.1	27.7	77.1	79.4	55.6	62.4

*주: 단위 정보는 <표 1>과 <표 2>를 참조.

4. 동아시아형: 느슨한 제도 연계와 낮은 이행⁷⁾

이 글에서 비교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행의 타이밍이다. 다른 하나는 이행의 계층화 측면이다. 언제 이행하는가와 어떤 방식으로 (비)이행하는가의 문제다.

보통 학교-노동시장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청년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시점이 이른다. 학교와 노동시장이 촘촘하게 연결되려면 교육제도와 노동시장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이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일찍 생애 경로가 갈라진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층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학교-노동시장의 연계가 느슨하고 독일은 촘촘하다. 일본은 그 사이에 있다. 미국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교육 체제의 층화 수준이 낮다. 교육은 분권화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은 일반적이다. 고졸자 다수는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접속해 20대 중반까지 어려운 시기를 견딘다. 여기서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큰 의미가 없다. 졸업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나 의미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초기에 이직이 잦다. 훈련은 직장에서 이뤄진다. 독일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고졸자는 견습기간 3년을 거친 18세 무렵에 성인 직업으로 진입한다. 일자리는 도제 훈련의 수료 자격에 따라 배분된다. 노동시장은 직종별로 촘촘하게 분화되어 있고, 직종별로 그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과 자격증이 요구된다. 자격증은 동일 직종에서 널리 인정된다.

7) 이 장의 내용 일부는 국회미래연구원 기고문인 '미래생각'(2023년 3월 8일자)에도 수록되어 있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우면서도 독일의 특징이 일부 혼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고 일반교육 중심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미국과 달리 학교와 노동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학교 추천제'라는 제도적 고리가 있다(Rosenbaum and Tariya, 1989). 이를 통해 청년이 미국과 같이 자유노동시장에 접속하지 않고 독일과 같이 장기고용 내부노동시장에 접속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독일처럼 직종별 훈련 자격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학력과 학업 성적에 따라 배분된다. 직접 연계를 통해 취업하므로 연령 제한이 엄격하고, 평생학습 기회는 닫혀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특징이 혼합된 사례로, 또는 특정 측면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독자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다. 동년배의 대다수가 대학까지 마친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낮다. 교육 과정의 표준화 수준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교육 과정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되어 있다. 한편 대규모 공채 제도 등과 같은 일본의 특징이 있기도 하다.

교육 제도와 노동 제도가 연결되는 방식은 한 사회에서 계층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와 관계있다. 미국의 교육사회학자 Alan C. Kerckhoff는 1996년에 둘의 관계에 대해 네 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커리어가 좀 더 촘촘하게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일찍 교육과 직업 전망을 구체화할 것이다. 둘째, 커리어가 좀 더 촘촘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처지를 쉽게 수용할 것이다. 셋째, 커리어가 좀 더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덜 활발할 것이다. 커리어가 일찍 결정될수록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넷째, 커리어가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의 영향력이 약할 것이다. 기업 간 이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위 가설을 한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늦게 교육과 직업 전망을 구체화·현실화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 처지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할 것이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뚜렷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간 이동은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생애 경로가 일찌감치 갈리는 사회는 공식적으로 총화되어 있는 사회다. 각 경로는 나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 경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아주 크지 않다면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총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총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자의 꿈이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나름의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체제에서 시험은 어떤 직업적 역할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이 강하다.

생애 경로가 나중어야 갈리는 사회는 비공식적으로 총화되어 있는 사회다.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이 역동성을 낳는 맥락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작동한다. 학군, 학교, 성적 등으로 짜인 위계 구조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일관된, 다수가 포함되는 위계 구조를 만들어낸다. 단일한 위계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교에 따른 압박감을 훨씬 크게 느낀다. 실패감 또한 훨씬 크게 느낀다. 이 단일 위계 구조를 조율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선발 시험'이다. 선발 시험의 목적은 준비된 지위와 역할 수행에 합당한 일정 수의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사회학자 Jutta Allmendinger는 미국과 독일의 차이를 1989년에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미국에서 선택의 범위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택의 범위는 차등적인 교육의 질로 인해 제약된다. 반면, 독일은 교육연수가 계층화되어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동일 수준에서는 훈련의 질이 같다. 따라서 그 과정과 연계된 미래의 가능성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보이지만, 안정적이다. 나름의 위치만 지키면 무난하게 살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위계는 더욱 강력하게 일상을 규정한다. 매우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실패자에게는 가혹하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이 더 불평등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불평등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Brzinsky-Fay, 2007)이다.

한국은 후자 사회의 역동성을, 후자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중 교육 체제가 엘리트 교육과 분리되어 형성된 유럽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초등교육 체제가 먼저 형성된 후 순차적으로 학교급을 높여가면서 교육이 팽창되었다. 중등교육 팽창에 이은 고등교육 팽창은 형식적으로는 기회의 평등화를 가져왔다. 뜨거운 교육열과 이에 상응하는 기회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노동시장 시스템은 일정 기간까지는 계층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 속도와 수준은 세계에서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보편화되면 계층화를 비공식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김영화, 2000). 형식적으로 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일원화된 경쟁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회 확대 이전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김두환, 2015; Kim and Choi, 2015). 그에 따른 결과의 격차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시점이 여러 국가들 가운데 유례없는 수준으로 지연되는 현상은 형식적 평등화와 실질적 계층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수가 대학에 갈 수 있고 간다는 점에서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위계화에 따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어진 지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늦은 시기까지 경쟁에 참여해야 하고 한 번 경주에 참여하면 도중에 그만두기 어렵다. 다른 길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에만 온 관심이 쏠려 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정당한 것이 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노동시장 연계 측면에서, 계층화 측면에서 한국 사회는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 (노동) 결과의 평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느 대학을 나오건 비슷한 일을 한다면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게임의 룰이 공정한지를 따지는 것에서 게임 자체가 공정한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으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데에 힘을 써야 하고, 기본소득 등 사회 정책의 맥락에서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두환. 2015. “한국 고등교육 팽창의 한계: 대학교육성과의 양극화.” 『사회사상과 문화』 18(3):139-186.
- 김영화. 2000. 『한국의 교육과 사회』. 교육과학사.
- 대한상공회의소. 2013. 『한·미·일·독 기업의 채용시스템 비교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 이상직·민보경·이채정·김동규·김미선·노법래·백광렬·사사노미사에·조해인·조소연. 2022. 『전환기 청년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 이진구·이효중·박상훈. 2016. 『한국 인력채용 방식의 특성분석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보고서.
- Allmendinger, Jutta. 1989. “Educational Systems and Labor Market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5(3):231-250.
- Bartholomew, D. J., F. Steele, J. Galbraith and I. Moustaki. 2008. *Analysis of Multivariate Social Science Data* (2nd ed.). CRC Press.
- Brzinsky-Fay, C. 2007. “Lost in Transition? Labour Market Entry Sequences of School Leaver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09-422.
- Kerckhoff, Alan C. 1996. “Building Conceptual and Empirical Bridges between Studies of Educational and Labor Force Careers.” in Alan C. Kerckhoff ed. *Gen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Toward a New Research Agenda*. Westview Press. pp. 37-56.
- Kim, Doo Hwan and Choi Yool. 2015. “The Irony of the Unchecked Growth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Crystallization of Class Cleavages and Intensifying Status Competition.” *Development and Society* 44(3):435-463.
- Rosenbaum, James E. and Takehiko Tariya. 1989. “From High School to Work: Market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6):1334-1365.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근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총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데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근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의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근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